【 2016.08.03(수) 강원도민일보 】

"강원경제 회복 중견건설사 육성 필요"

의무공동도급·분할발주 확대 관건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강원도내 중견 건설사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설협회 도회가 발표한 20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전국 순위 100위에 포함된 업체는 원주 요진건설 단 한곳에 불과했다.

도내 시공평가 1위를 차지한 요진건설은 전국 순위 38위다.

2위인 고성 현대아산은 119위, 3위인 강릉 신아건설은 164위며 나머지 업체들은 200위 밖이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분야가 강원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30%다.

이 때문에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 건설사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건설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의 경우, 공공분야 의존도가 70%에 육박해 자치단체와 공기관들의 협조 없이는 건설 활성화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해당 공사의 분할발주, 도내에서 진행된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계약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 건설단체 관계자는 "동계특수가 내년이면 완전히 종료돼 새로운 건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영세·중소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2016.08.03(수) 건설경제 】

건설제도 선진화, '고삐' 조인다

국토부 "새 입찰 시범사업 착수, 적격심사·턴키 등 개선 속도낼 것"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건설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각종 입찰제도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적격심사제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휴가시즌이 끝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 건설정책 개선작업이 본격화된다. ▶관련기사2면

우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4건이 연말까지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이 1건씩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토부는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

가격경쟁 없이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단가를 뽑는 '순수내역 입찰' 방식도 시범사업 속도를 높인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와 흑산도공항에 이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금강5교와 금강보행교 등 모두 5개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순수내역 입찰방식의 경우 단순공종 위주로 4건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시공책임형 CM' 4건
기술경쟁 '확정가격 최상설계'
'순수내역 입찰' 등 잇따라 적용
공사수행능력 심사 강화도

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솎아내려는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처럼 몇 건의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턴키의 경우 설계심의 위원의 정원을 늘리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다.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보증제도의 필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을 위한 보증수수료 재인하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국제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입찰방식을 국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또 설계감리, VE(가치공학) 등으로 분산된 건설사업관리를 통합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을 유연하게 바꾸는 작업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용역형 CM(CM for Fee)의 실적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

세종시 관가도 휴가철이다. 호흡을 고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때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휴가다. 그러나 휴가철이 끝나면 올 하반기에는 건설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역대급'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개선의 폭도 커질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속도조절'을 당부했을 정도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건설정책 이슈를 시공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로 나눠 이틀에 걸쳐 싣는다.

하반기 건설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실업체 퇴출'이다. 국민경제를 선도했던 건설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입찰제도 등 생산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건설업체 수가 너무 많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만큼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를 서둘러 솎아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국토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공책임형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금강보행교 다음달 발주

CM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을 위해선 기재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특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책임형 CM은 설계 단계에서 미리 선정된 시공사가 CM 역할을 하고, 설계 종료 전에 미리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으로 시공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한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업체 부담이지만 수익이 생기면 발주자와 CM사가 나눠 갖는다.

1단계 계약은 경쟁입찰이지만 2단계 시공사 계약은 수의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존 국가계약법 체계에 없는 방식이다. 공공공사에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낯설다.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이미 완성됐다. 시범사업을 위해 1000억원 안팎의 고난이도 공사 4건도 잠정 확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일정에 맞춰 공사발주를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고 서둘러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순수내역 입찰 방식에 대한 시범사업도 속도를 낸다. 흑산도공항에 대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주된다.

LH가 추진하는 금강5교(사업비 1000여억원)와 금강보행교(900여억원) 시범사업도 주목된다. 특히 금강보행교는 국내 최초의 보행 전용다리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내년 1월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다음달 중 발주 예정이다.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위한 순수내역 입찰제는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건설사들이 물량·단가를 뽑기 쉽고 심사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단순공종 위주로 대상사업을 물색 중이다.

적격심사제와 보증제도 개선 방안은 부실업체 퇴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 등 제도 개선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 심사를 강화해 '운찰제'로 전락한 현행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개선해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고 입찰참가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자 명부(long list)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증제도 개선안은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실기업의 보증심사 강화, 거부낙찰률 상향 등을 통해 필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업체의 신용등급 외에도 사업별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상 처벌 이력까지 고려해 수수료 및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요소가 많아 시범사업을 몇 번 해보고 나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중간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특성 등을 감안해 변별력을 강화한 특수 기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국토부가 지난 5월 함께 발표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설계보상비 인상과 함께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하고 유찰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작업이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김태형기자 kth@